

“6월 골든타임”...전남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선점 나서

전남도가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등 40개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2일 도청 사재필실에서 황기연 행정부지사 주재로 공공기관 유치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추진단 활동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공유했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남도는 6월을 유치 성패를 좌우할 골든타임으로 판단하고 유치 활동을

집중 전개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광주시와의 행정통합을 전제로 에너지와 농수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등 5개 미래 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40개 유치 목표기관을 선점해 대응하고 있다.

지난 5월 출범한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은 6월까지를 집중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목표기관 가운데 22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 전남의 산업 기반과 정주 여건, 각종 인센티브를 설명하는 등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이달 말까지 나머지 18개 기관에 대해서도 방문 활동을 이

농·수협·지역난방공사·환경공단 등 40곳 목표 1차 이전 성과 분석 토대 맞춤형 유치 전략 수립 기관 연쇄 방문...농협법·수협법 개정 필요성 제시

각 계획이다. 기관 방문 과정에서는 이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등 일부 기관은 본사 이전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

양부처를 대상으로 건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실제 농협법 개정안은 문금주 국회의원이, 수협법 개정안은 서삼석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기관 임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 요구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도 참석해 이전 기

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 환경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제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분석 결과도 공유했다.

자체 평가 결과 제1차 이전을 통해 지방세입 6172억원 증가, 지역인재 채용 4083명, 기업 입주 1171개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과 교통, 의료서비스 등 정주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원활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단계별 입주 공간 확보 전략과 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공실 건물을 활용하고, 이후 혁신도시 내 미래발 클러스터를 활

용한 뒤 필요할 경우 혁신도시 확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향후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범특별시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과 유치 분위기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더 넓은 경제권과 효율화된 통합 행정체계라는 기반 위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정부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뒤처지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유치 활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우편투표함보관 장소 폐쇄회로(CC)TV 영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현관 외벽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각 구별 선거위의 우편투표함보관 장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민주당 텃밭 광주·전남,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

▶1면에서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도 주목된다.

민주당 임문영 후보와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 조국혁신당 배수진 후보, 진보당 전주연 후보,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무소속 구본기 후보 등 6명이 경쟁한다.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평가받지만 전국 유일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각 정당의 조직력과 지지층 결집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안방 사수 여부와 무소속·야권 후보들의 돌풍 가능성이 최대 관심사다. 광주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우세 전망이 강하지만 전남은 곳곳에서 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강진과 순천, 함평, 담양, 신안, 완도, 진도, 광양, 여수 등 9곳을 대표 격전지로 꼽고 있다.

표표율은 이번 선거를 가를 핵심 변수다. 광주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37.7%를 기록하며 전국 최저 투표율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면 광주는 10.55%p, 전남은 7.91%p 상승했다.

특히 신안군은 61.31%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고, 진도·함평·강진·담양 등 주요 격전지에서도 50%를 넘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여야 후보 진영 모두 높은 사전투표율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하고 있어 본투표 참여율이 최종 승부를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최초로 광주 남구1·북구1·북구2·광산3 선거구에 도입된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결과도 관심사다. 민주당이 우세를 이어갈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무소속 후보들이 의석 확보에 성공하며 다당제 기반을 넓힐지도 관전포인트다.

결과는 이제 유권자들의 손에 달렸다. 학연·지연·혈연 등에 얽힌 ‘묻지마 투표’가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발전과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인물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 제대로 된 후보에게 표를 행사해야 한다.

아울러 막강한 권한을 가진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역량있는 지방의정들을 뽑아야 하는 것도 유권자들의 의무다.

광주시, 3814억 추경 편성...고유가 대응·민생회복 총력

고유가 피해지원금 2079억 등 시민체감형 예산 집중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도시철도 2호선 등 현안 반영

광주시는 중동전성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3814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2일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면 광주시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 7조8809억원보다 3814억원(5.0%) 증가한 8조2623억원으로 늘어난다.

광주시는 정부의 중동발 경제위기 대응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해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079억원을 비롯해 의료급여 비용 132억원, 대중교통비 환급 45억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15억원, 가족돌봄 및 은둔청년 지원 4억8000만원, 발달장애인 지원 5억원 등을 반영했다.

정부 추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도 추가 편성했다. 전 기차동차 민간보급 22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85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144억원 등을 반영해 고유가 위기 극복과 교통 분야 안정화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오는 7월 1일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한 예산도 담겼다.

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 구축과 청사 간 방송중계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보시스템 통합 사업에 12억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6억원도 반영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대응 예산도 포함됐다. 2025년 호우피해 재난대책 126억원, 폭염대책 17억원,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6억원, 지방하천 재해

복구 17억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15억원 등을 편성해 여름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정비 5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100억원, 군공항 이전사업 기반용역 30억원 등을 반영했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2028년 전국체육대회 준비와 도시 기반시설 확충, 광주·전남 상생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덕 광주시 예산담당관은 “이번 추경은 중동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추경과 보조를 맞춘 민생 지원 예산”이라며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재해복구 행정절차 간소화...공사비용 빨라진다

경제성 검토 등 절차 일부 생략 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가 추가됐다.

기존에도 재해복구 등 긴급공사는 절차 조정이 가능했지만, 현장에서 통상적인 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지는 판단하기 어려워 관련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9000여건의 재해 복구공사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돼 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속도가 크게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정절차를 조정해 시행할 수 있는 대상에 '자연재해대책법

연립뉴스

전남선관위,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 3명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 캠프 관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모 시장 후보를 위해 지역 농협 비상임 임원 B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

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모 후보자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과 노래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 게재한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C씨는 의혹의 출처를 일명 '카더라 통신'이라고 표현했을 뿐, 공표한 내용의 진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군수 선거에 출마해 선거공보에 전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D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D씨는 4건의 전과가 있었지만, 책자형 선거공보 소명 부분에 “본인은 단 한 번도 범죄를 안 했음이 확인됩니다”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내년부터 연차 '시간 단위' 사용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하루 단위로 쓸 수 있었던 연차 유급 휴가를 내년부터는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 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20건, 법

령안 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외에도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하면 휴게 시간 없이 휴게 시간이 축소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합의 내용이 반영됐다. 시행 시점은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의 경우 법안 공포 1년 후, 휴게 시간 유연화는 공포 6개월 후다.

보호시설에 입소할 당시 미성년인 성폭력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상관 없이 25세까지 시설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 시

행된다.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고의로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 법률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했을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자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위반했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으면 그 사실을 피해자 등에 통지할 수 있는데, 이를 전후나 휴대전화 문자,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하도록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연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자 등이 수렴해야 하는 재해 대처 계획에 다중 운집 인파 사고 방지와 무대 시설 설치·해체 안전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연장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성은 기자 solee235@gwangnam.co.kr